

칼럼

장기채 주필



## 노인 사회 삶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는 선진국, 개발 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행하는데 115년이 걸렸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4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독일은 각각 40년과 37년, 미국은 73년과 21년이 걸렸다고 한다.

2006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경과됐다. 한국은 고령사회 18년 또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겨우 8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유독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충분한 경제 성장도 이루어 못한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한마디로 '압축적 고령화'라 할 수 있다. 빠른 속도 만큼 문제점들이 응축돼 있는데도 국가적 사회적 대비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허접 투성이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노인들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난병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고령자 절반 가량

(48.1%)은 빈곤층이다. 그런데다 지금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선 24.3, 2050년에는 OECD 평균 25.8%를 훨씬 뛰어넘는 3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류 사회는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던 장수 사회를 이룩했다.

그러나 장수 사회의 도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 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를 야기했다.

예컨대 1950년경의 아시아권 노인인구는 5,760만 명으로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이면 9억 2,27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7.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노인 부양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노년 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지만 2040년에는 57.2명, 2060년에는 80.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 지출이 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과연 한국의 노인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가.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버림받은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다.

부모에게 효(孝)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채를 지고 있다.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정책 순위의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사회'의 운

영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각종 사회 보험 운영에 구멍이 생긴다. 돈을 내는 젊은이는 적고, 돈을 타기는 노인만 많으면 보험에 든 연금이든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은 젊은이들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 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66조 5637억 원을 쏟아부었다.

출산율을 높여서 고령화를 저지하기란 이미 때가 늦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균형 잡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처럼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준비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더 치밀하고 배려 깊은 시책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 자동차 회사 BMW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해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나무 바닥재를 깔고, 조명을 더 밝히고, 작업장에 확대경을 설치하는 등 크고 작은 70여 개 조치를 취했다.

비용은 5만 달러, 5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무엇보다 결근율이 크게 줄어들고 공장의 연간 생산성은 7%가 높아졌다. BMW는 역시 인류 기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령화에 대비한 혁신인 셈이다.

社說

## 홍콩 국가안전법 유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끝내 홍콩 국가안전법(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이 법은 전날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

중국은 보안법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스스로 약속한 일국 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무위 실의과정에서 오히려 쳐별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전명한 것이다.

미국은 이에 맞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등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전격 박탈하는 한편 한후 주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2개국(G2)의 갈등이 홍콩 문제를 계기로 다시 큰불로 번지거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초강대국인 두 나라가 보편의 가치와 원칙 아래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는커녕 사사건건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이 입안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부세력의 간섭 활동 조성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 집행을 위해 홍콩 안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보안처'가 설치된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이 대다수의 나라가 체제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법률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 입법 과정, 국제 환경 등을 볼 때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나 접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심각하다. 과거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아래서 여실히 당했지만, 권위주의적 체제에서는 이런 부류의 법률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률 제정 과정도 홍콩인들이 자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악법을 철폐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옳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기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등록번호 광주기 00021 (일간)	호남신문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기길 16-1 Tel (02) 2238-0003
기자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과속 사고위험 높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지금의 아파트는 주차장의 확보율이 높고 지하화되어 있지만 이미 세워진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 많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등의 이동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벌발하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정한 경우 도로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로 외 구역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통제·관리하고 있으면 사유지에 해당되어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인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는 일부 차량의 과속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놀이문화, 뛰어 다니기, 인라인 롤링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판례상 도로인 경우 자차단체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km 이하로 반드시 서행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서 뛰어나올지 모르고 또한 자전거가 전방에서 달려오는지를 예상하며 전방과 좌우를 번갈아가며 예의주시해야 한다.

사실 아이들은 학교 앞 스쿨존 보다 아파트 단지 내가 더 무섭다고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가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안전지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기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리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띠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